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2007. 11

통일정세분석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2007. 11

배 정 호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2
1.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와 아베총리의 국정운영 리더십 약화	2
2. 자민당내 파벌의 반아소 포위망 구축과 후쿠다 대세론 등장	4
3. 자민당 파벌의 후쿠다 야스오의 지지	5
4. 총리 선거와 중의원 결정 우선주의	6
III. 후쿠다 정권의 특징	8
1. 거당체제	8
2. 계파안배 및 소폭개각	9
3. 총선 대비 잠정·관리내각	10
IV. 후쿠다 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12
1. 대외전략노선: 미·일동맹 강화와 아시아외교의 조화	12

2. 대북전략: ‘대화와 압력’의 기조아래 대화 중시 14

V.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18

1.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18

2. 한·일 전략적 대화 및 협력의 강화 19

I. 문제제기

- 2007년 7·29 참의원 선거의 자민당 대참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아소 다로 전 간사장이 총리감으로 일본 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으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후쿠다 대세론’의 확산 속에 제22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음.
- 후쿠다 야스오 자민당 총재는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의 총리 경쟁에서 중의원 결정을 우선시하는 헌법규정에 의해 제91대 총리로 지명·확정되었음.
- 후쿠다 정권이 등장하면서 아시아 중시외교의 전개, 대북 강경정책의 전환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 후쿠다 정권의 특징 및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권력적 특징에 관해 분석한 뒤,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을 고찰하고,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1.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와 아베총리의 국정운영 리더십 약화

-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 자민당은 27석 감소, 민주당은 28석이 증가함으로써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게 되고, 민주당은 참의원의 제1당으로 등장하게 됨(<표 1> 참조).
- 아베 내각은 참의원 과반수 의석의 확보 실패로 인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킬 능력이 없음.

<표 1> 일본 참의원 의석 분포(2007.11. 현재)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의석분포 (242석)	83	109	20	7	5	4	14

- 자민당은 중의원의 2/3 의석수(320석)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입법화를 시킬 능력은 있으나, 정국 주도권을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게 빼앗김으로써, 아베 총리의 정국 운용 및 리더십은 매우 취약해짐.
 -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만 법안 성립이 가능(<표 2> 참조).

<표 2>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2007.11. 현재)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의석분포 (480석)	306	113	31	9	7	4	10

- 아베 총리는 2007년 11월 1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 조치법의 연장을 위해 총리직을 걸고, 9월 10일 개막된 임시국회에서 ‘연장 실패시 내각 총퇴진’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추진하였으나, 오자와 이치로 대표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침.
 - 제1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테러대책법 연장 반대 → 총리 퇴진 → 중의원 해산’이라는 전략 아래 강력하게 반대.
- 아베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게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한 여야 당수회담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함.
- 아베 총리는 정국 운용과 리더십의 한계에 직면하고, 국회소신표명연설(2007.9.11)을 행한 다음날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명함.
 - 7:29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아베내각 침몰.

2. 자민당 내 파벌의 반아소 포위망 구축과 후쿠다 대세론 대두

-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차기 총리 선출 일정이 2007년 9월 23일에 자민당 총재 선출, 9월 25일에 총리 선출 등으로 결정됨.
- 아베 총리의 전격적 사임 직후에는 아소 다로 간사장이 일본 언론의 관심속에 차기 총리감으로 급부상함.
- 그러나 아베 총리의 충격적 사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연대책임론’, 자민당 내 위기감과 ‘아베 총리와의 리더십·정책노선 차별화’ 등이 제기되면서 자민당 내 파벌들 사이에는 반아소 포위망이 결속되기 시작함.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지지 표명과 더불어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출마의사를 표명(9.14)하고 9월 15일에 후보등록을 하자 즉시 9개 파벌 중 6개 파벌이 ‘후쿠다 지지’를 표명함.
 - 이후, 아소파를 제외한 8개 파벌이 답합하여 후쿠다를 차기 총리로 지지·추대.
- ‘후쿠다 대세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9·23 총재선거는 ‘후쿠다 대 아소’의 대결로 치러졌고, 예상대로 후쿠다 야스오는 제22대 총재로 선출됨.
 - 중·참의원 국회의원 387명과 지방표 141표로 구성된 전체 528표 가운데 당선 요건인 과반수(264표 이상)를 훨씬 상회하는 330표를 획득.

- 아소 다로는 197표를 획득하여 선전함.
- 8개 파벌의 총의원 수인 302표 가운데 80표 정도는 아소 후보쪽으로 누출 추정.

3. 자민당내 파벌의 후쿠다 야스오의 지지

가. 후쿠다 야스오의 조정능력 균형감각

- 후쿠다 야스오는 모리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에서 1,289일의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을 역임하면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한 조정능력을 발휘하였음.
- 자민당은 7·29 참의원의 대참패와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아베 총리가 급작스럽게 사임한 위기상황에서, 후쿠다 야스오는 검증된 조정능력과 균형감각으로 상황 극복과 더불어 자민당 정부의 경직된 이미지를 전환시키는데 적임자로 부각됨.
- 각 파벌은 위기상황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아소 다로보다 후쿠다 야스오를 선호.

나. 각 파벌의 정치적 이해와 후쿠다 야스오의 정치성향의 타협

- 후쿠다 야스오가 관방장관으로서의 발휘한 높은 조정능력은 자신의 개성·정치적 이해보다 당·정의 조정과 타협에 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각 파벌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하기 편하다는 것을 의미.

- 각 파벌이 정치적 이해타산과 관련, 아소 다로보다 대화와 타협이 편한 상대인 후쿠다 야스오를 선호함.

다. 부친 故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보이지 않는 후광’

- 1970년대 총리를 지닌 후쿠다 다케오는 퇴임 후 ‘청화회(淸和會)’를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청화회’ 회장은 후쿠다 다케오-아베 신타로-미쓰즈카 히로시-모리 요시로-마치무라 노부타카로 이어져 오고 있음.
 - 마치무라 파벌은 현재 자민당의 최대파벌.
- ‘청화회’의 계승자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아소 대세론’이 급부상할 때, 후쿠다 야스오를 격려하며 총리 출마를 권유하는 한편, 각 파벌의 영수들을 만나 후쿠다 지지를 설득함.
-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후쿠다 다케오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는데, 후쿠다 야스오를 차기 총재·총리로 지지표명을 하며 ‘후쿠다 대세론’의 부상에 결정적 역할을 함.

4. 총리 선거와 중의원 결정 우선주의

- 총리 선거는 ‘자민당의 후쿠다 대 민주당의 오자와’ 대결로 치러짐 (9.25).
 - ‘가쿠후쿠(角福) 전쟁’의 부활.
-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자민당 총재가 총투표수 477

표의 과반수인 338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됨.

- 곧이어 실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총 투표수 239표의 133표를 획득해 총리로 지명됨.

- 복수 총리 지명문제로 9년만에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총리 지명자 단일화에 실패하고, 중의원 결정을 존중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후쿠다 야스오 자민당 총재가 제91대 총리로 지명·확정됨.

Ⅲ. 후쿠다 정권의 특징

1. 거당체제

- 후쿠다 야스오 자민당 신임 총재는 총리선거 하루 전에 당 4역 인사를 단행하고(9.24), 자신을 지원해 준 각 파벌 영수들을 중용함 (<표 3>참조).
 - 당 4역 인사에 4개 파벌 영수를 중용.
- 2명의 파벌회장이 각료직에 포진함.
 - 고무라 도시히코 외무대신, 마치무라 노부타케 관방장관
- 후쿠다 총리는 총재 경합자였던 아소 전 간사장을 배려하여 경선에서 아소 전 간사장을 지지하였던 하타야마 구니오 법무장관, 아마리 야끼라 경제산업장관을 유임시킴.

<표 3> 당 4역 인사

간사장	이부키 분메이	이부키파 회장, 전 문부과학대신
총무회장	니카이 도시히로	유임
정무조사회장	다니가키 사타가즈	다니가키파 회장, 전 재무대신
선거대책위원장	고가 마코토	고가파 회장, 전 간사장

2. 계파안배 및 소폭개각

- 온건·현실·보수주의 성향으로 신중한 성격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내각의 성격을 ‘배수진 내각’으로 규정하고, 계파안배 소폭개각의 조각을 단행함.
 - 후쿠다 총리는 “임시국회가 개회 중, ‘테러대책특별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아베 총리 2기 내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고 언급.

- 2명 신입, 2명 자리 이동, 13명 각료 유임, 즉 아베 총리 2기 내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한 내각이 출범됨(<표 4>참조).
 - 17명 각료 가운데 새로 기용된 각료는 2명(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 학장관, 이시바 시게루 방위장관)에 불과,
 - 고무라 도시히코 외무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케 관방장관은 자리 이동.

- 부대신·정무관 인사에서는 1명만 교체, 나머지는 유임시킴.
 - 총무부대신 1명 교체(공명당 → 공명당).
 - 정무관 26명 전원 유임.

<표 4> 후쿠다 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무장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재무장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경제재정담당장관	오다 히로코(大田弘子)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금융·행정개혁장관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善美)
농림수산업장관	엔도 타케히코(遠藤武彦)
법무장관	하토야마 쿠니오(鳩山邦夫)
문부과학장관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郎)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冬柴鐵三)
환경장관	와카바야시마사토시(若林正俊)
국가공안위원장	이즈미 신야(泉信也)
오키나와·북방담당장관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소자화(少子化)	카미카와 요오코(上川陽子)

3. 총선 대비 잠정·관리내각

-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총재 경선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야당과의 합의에 의한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언급함.

- 민주당은 연말·연초 중의원 해산·총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안 처리 직후, 2008년 4월경에 중의원 해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전문가들은 후쿠다 총리가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직후, 2008년 7월의 중의원 해산·총선을 내심 원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므로 후쿠다 내각은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비한 잠정·관리 내각이라고 지적할 수 있음.

- 2008년 중의원 해산·총선을 겨냥한 ‘후쿠다의 자민당 대 오자와의 민주당’ 대결이 ‘가쿠후쿠(角福) 전쟁’의 부활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후쿠다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테러대책 특별 법안’을 결정한 뒤(10.17),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여야 대표회담」(10.30)에서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단호하게 거절함.

- 후쿠다 정권의 장래는 고이즈미 정권과 아베 정권이 남긴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달려있음.
 - 새로운 테러대책특별법 문제,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도시와 지방간 격차 문제, 소비세 인상, 연금기록 부실 문제 등을 처리하는 정치력, 정책능력 등에 달려있음.

- 후쿠다 정권의 정치적 특성은 이와 같은 정책과제들을 해결하여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자생적으로 획득하고, 2008년의 중의원 해산·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나타날 것임.

IV. 후쿠다 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1. 대외전략노선: 미·일동맹 강화와 아시아외교의 조화

- 고이즈미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후유증을 초래하였음.
- 따라서 아베 정권의 주요 외교 과제는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이었고,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 한국, 중국 등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고이즈미 정권시 갈등의 불씨 가운데 하나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음.
- 아베 정권의 단명으로,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은 여전히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음.
- 동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로 등장하게 되면서, 아시아 외교의 추진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음.
- 후쿠다 총리는 「총재 출마 기자회견」(9.15)에서 경선에서 승리하여 총리에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을 명백히 함.
 - 「일본주재 외국특파원 기자회견」(9.19)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등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인정하고 사과

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임을 거듭 거듭 강조.

- 후쿠다 총리는 주변국의 기대대로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10.1)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선언함.
 -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미래지향형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
 - “중국과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를 구축해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고 역설.

- 아울러, 후쿠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미·일동맹의 견지가 일본외교의 기본이라고 역설하면서,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급유활동 연장’에 대해 야당의 지지를 호소함.
 - 각료회의(10.17)에서 새로운 테러대책 특별법 결정,
 - 새로운 테러대책법은 기한 1년의 급유·급수에 한정.

-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명백히 천명된 것처럼,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중시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임.

- 후쿠다 정권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기초아래 국제협조를 향한 전방위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됨.

2. 대북전략: '대화과 압력'의 기초아래 대화 중시

가. 『국회 소신 표명 연설』과 대북관계 개선 의지 표명

-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둔 대북 강경정책을 전개하였음.
 - 북·일관계는 2·13 합의 이후 두 차례의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거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악화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음.
- 납치문제의 국내 정치화 등으로 경직되어 있는 대북 강경정책에 후쿠다 정권의 등장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짐.
-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경선과정에서 “내 손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욕을 표명하였고, ‘협상의 틈이 없을 정도’로 북·일관계가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함.
 - 후쿠다 총리는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만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을 시사.
- 후쿠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 연설』(10.1)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 후쿠다 총리, 북한의 납치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대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 국교정상화의 실현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

- 남북정상회담 개최(10.2~4)에 대해 후쿠다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였음.
 - 후쿠다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9.28)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해 주기를 부탁,
 -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

- 후쿠다 정권은 『2007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해 ‘안정적 관계의 정착’을 희망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단, 기무라 히토시 외무부 차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한 것에 대해 불만 표시.

나. 한계속의 대북접근전략 추진

-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이 아베정권이 결정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후쿠다 정권이 ‘실행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
 -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주목.

- 후쿠다 정권은 당·정 회의(10.4)에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의 실행’을 합의한 뒤, 각료회의(10.9)에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의 실행’을 결정함.

- 후쿠다 총리가 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둔 잠정내각이 납치문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

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음.

- 후쿠다 정권의 대북접근 한계.

○ 후쿠다 총리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심양 북·일 비공식 회의’(10.14) 등을 통해 북한측에게 납치문제의 가시적인 성과에 따른 북·일관계의 진전시, 대북경제제재의 조기 해제를 설명함.

○ 북·일 양국은 울란바트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9.5~6)의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와 관련, 사전조율을 위해 심양에서 북·일 비공식 회의를 가졌고, 이 회의에서 연내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화를 가속화하는데 합의함.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심양 북·일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 일본측 대표인 야마다 시게오 외무성 동북아 과장은 납치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 대화 중시 대북정책 노선, 북·일관계의 진전시 대북 경제제재의 조기 해제 등을 설명함.

○ 그러나, 북한은 『노동신문』(2007.10.24)을 통하여 일본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결정에 대해 ‘6자회담 파탄 의도’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며,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 『노동신문』은 납치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 교착상태의 북·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고무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10.26)에서 후쿠다 총리의 대화 중시 노선을 반영하여 “납치자 가운데 몇 명이라도 귀국”하면 이를 진전으로 간주하고, 진전의 정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조치 및 경제지원에 응할 것을 시사함.
 - 납치문제의 타개를 위한 전술적 차원의 방침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 북한이 납치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일본 외무성의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타남.

- 후쿠다 총리, 마치무라 관방장관 등은 고무라 외상의 기자회견과 관련, ‘납치피해자의 전원 귀국’ 목표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함.
 - 중의원 해산·총선을 앞둔 내각으로서 납치문제 관련 국내 여론을 고려.

V.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1.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 후쿠다 정권은 당·정 각 파벌들의 영수들이 포진된 거당체제이고, 2008년 중의원 해산·총선 시까지의 잠정·관리내각임.
 -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국내 여론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소신있게 국정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온건 현실 보수주의 성향으로 신중한 성격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조정능력은 뛰어나지만, 카리스마, 정국주도력 등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등에 비해서 약함.
-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국정운용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자생적으로 획득하고 2008년의 조기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임.
-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정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
 - 북한도 후쿠다 정권의 특성 및 한계, 대북전략노선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북·일관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임.

2. 한·일 전략적 대화 및 협력의 강화

- 중국은 후쿠다 정권의 등장이 중·일관계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후쿠다 정권의 지속을 오자와 대표의 민주당보다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아시아 외교의 적극적 추진 및 대화 중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 후쿠다 총리가 이전의 고이즈미 총리, 아베 총리,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 등보다 ‘대화를 통한 협력’ 파트너로 삼기에 보다 적합하므로, 납치문제 등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전략적 협력과 정책대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외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함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장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 정세 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박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통일정세분석 2007-12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7년 11월 일
발행일 2007년 11월 일
